

광주시 “한빛원전 사고 대비 국가차원 모의실험하자” 요청했더니

# “변수 많아 불필요...사고나면 대처” 원자력안전위 답변이 ‘기가 막혀’

한빛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광주시의 요청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중대사고는 방사성 물질 방출량, 기상 등 변수가 많아 사전 모의실험은 불필요하다.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대처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국민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종합기관을 자임하는 국민안전처는 같은 요청을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원안위에 물으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광주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일 “한빛원전 재난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담은 공문을 원안위에 보냈다.

원전 사고가 갖는 치명적인 위험을 고려하면 영광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분야(방사능 누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 원전 방재대책을 세우기 위한 요청이었다.

광주시는 공문에서 ▲한빛원전과 근거리(50km)에 위치한 인구 150만의 대도시라는 점 ▲원전 사고는 재난의 규모 면에서 국가차원의 상황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국가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 ▲전문성 등 지자체의 한계 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집권여당이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국민 안전 최우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당국이 한빛원전의 지리적·기상학적 특성에 맞게 사고 대비 시뮬레이션

국민안전처 “우리 소관 아니다”

전문가들 단일한 대책 지적

“원전 담당부처 물갈이해야”

을 한 뒤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7일 원안위는 “원전 사고는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방출 지속시간, 기상조건(풍향, 풍속, 강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는 실제 사고시 대응조치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안위는 공문을 통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예상선량 평가시스템(기상과 지형을 고려해 방사성물질 농도 예측)을 통해 방사능농도 및 예상피폭선량에 대한 평가를 즉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데이터(주민보호조치 범위, 대피 경로)를 생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안위의 입장을 접한 원전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 지 40년이나 됐는데도, 원전 소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원전 시뮬레이션 추진 건의를 받고서도 “사고 나면 재빨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등 단일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로부터 지난 5일 같은 건의를 받은 국민안전처가 “원전 소관부처는 원안위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도 논란이다. 안

전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듯, 안전처는 국민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종합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광주시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전하지 않은 상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원자력공학 박사)은 “광주시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원안위가 이제라도 제 구실을 해달라’고 명석을 깔아준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안위가 겹쳐져 버린 꼴”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방재대책이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원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방치됐다. 원자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격납건물(콘크리트 돔)을 통해 유출되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 재빨리 대응하겠다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최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기념사에서 ‘원전 안전은 국가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원전 규제당국, 안전 담당 부처가 40년간 외면했던 원전 방재대책 수립에 서야한다. 허다못해 지방정부가 나서면 발목을 잡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기계공학 학사)는 “수십년간 원전 설계, 정비, 안전성 평가를 한 입장에서 보면, 원전 규제기관 원안위를 대폭 물갈이하지 않고선 새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전 규제를 해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시 전략 설명회 ‘초집중’ 2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에 모인 학부모들이 강사의 지원 전략을 집중해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 전통시장 화재예방 여전히 취약

무등·운암시장 전기점검 최하위 E등급 등 관리 부실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은 모두 31곳(상인회 미등록시장 포함)이다.

중소기업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은 올 초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 7곳을 상대로 2개월간에 걸쳐 화재안전을 점검했다. 전기점검에서는 7개 시장 중 무등시장과 운암시장이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전기설비가 기존에 현저히 미달하고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해

상당부분 시설 개선이 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등시장은 전기점검에서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소방점검에서도 D등급을 받아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장의 경우 남광주시장이 C등급, 월곡시장이 D등급을 받아 이곳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분야에서는 월곡시장과 대인시장, 운암시장이 B등급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광주시장과 남광주종합시장이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14곳의 전통시장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우산매일시장, 송정역전매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산수시장, 서방시장 등 6곳이 소방 분야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가스 분야에서 E등급을 받은 시장도 양동우산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과 산수시장 등 4곳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577개 전통시장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화재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은 화재시설 개선 등이 필요해 광주시에 통보했다”며 “이들 시장은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후배 보호하러 폭력 허위진술

○...술자리서 술병을 들고 제 3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배를 지켜주려 “저 사람은 맞아서 다친 게 아니라 자해했다”고 적격적으로 허위진술한 40대 남성이 절형 신세.

○...2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49)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40분께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A(45)씨가 옆에 있던 B(여·48)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목격하고도 A씨를 옆방으로 숨겨놓고 허위 진술을 반복한 혐의.

○...김씨는 폭행당한 B씨가 만취해서 상황을 모를 것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B씨가 자해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이웃에게도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을 추궁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김씨를 구속. /김형호기자 khh@

##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법원 “업체 이익보다 학습권 등 공익 중요”

광주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 1800여 명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행을 금지해 얻을 수 있는 업체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토지인도 소송과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의 통학차질·학습권 침해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인 그랜드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흥복학원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학로를 이용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에 비해 결코 적지 않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소 20년 이상 학교 통학로로 이용됐고, 유일한 통학로인 점, 채권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같은 점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통행을 금지시킬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 추후 분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 등을 통해 회복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랜드종합개발은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시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경매를 통해 51억원에 낙찰받았다. 옛 서진병원 부지는 흥복학원 설립자 이흥호씨 소유였지만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되면서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그랜드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인 1000㎡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고수의 미끼 수십억원대 아파트 투자 사기

법무법인 관계자 구속

‘고수의 미끼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시행 투자 사기를 벌인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 관계자가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분양 관련 투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광주 모 법무법인인 관계자 A(4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4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광주 모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0여명에게 8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을 안

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협약서와 계약서 등은 대표번호사의 이름이 적힌 법무법인 양식용 그대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을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지난 20일 나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의 한 대학에서 경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고독여 투자를 받았다”며 “검찰과 일선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6838-1230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 모텔

- 전남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